'2010 아트 광주' 개막 첫 날

국제 화단 거물들 대거 참석 대성황

국내외 갤러리 53곳 참여 흥행 기대
관람객 2000여명…작품 매매도 순조

광주의 첫 국제 미술장터인 '2010 아트 광주'(9월1~5일·이하 아트 광주)가 1일 상무지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식을 갖고 성대한 막을 올렸다.

광주에서 개최하는 첫 국제 아트페어라는 점이나 국내를 대표하는 아트페어인 KIAF 개막을 1주일 앞두고 치러진다는 점에서 흥행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이를 불식시키듯 개장 첫날 부터 2000여명의 관람객이 찾는 등 성황을 이뤘다.

이번 아트 광주는 세계 유수의 화랑뿐 아니라 공공영역의 미술재단과 기업 홍보관도 참여해 상업적 성격의 아트페어와 차별화를 시도했고 광주비엔날레와 함께 열려 저명한 아티스트와 컬렉터, 큐레이터, 비평가 등이 대거 참가,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개장 첫날에는 루벨 패밀리 컬렉션으로 잘 알려진 돈과 메라, 스위스 컬렉터 울리 직,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외국인 감독으로 내정된 아이 웨이웨이, 미국 작가 신디 셔면 등 국제 화단의 흐름을 좌우하는 거물들이 대거 참석했다.

영국의 리슨 갤러리 등 해외 갤러리 23곳과 서울의 박여숙 화랑과 지역의 나인갤러리 등 국내 30곳을 포함, 모두 53개 갤러리에서 280여명의 작가가 참여한 이번 아트 광주는 국내 아트페어 역사상 처음으로 외국화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본격적인 국제 아트페어이자 현대미술과 디자인이 같은 장소에서 시장을 형성하는 복합 아트페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세계 유수의 갤러리들이 참여하는 만큼 수준 높은 작품들이 많아 관람객들을 즐겁게 했다.

셔터가 내려진 상점처럼 설치된 런던 리슨갤러리 부스는 부스 자체가 예술품으로 관람객의 주목을 끌었으며 베이징 코뮨과 탕갤러리는 중국 현대미술의 흐름을 이해하는 자리로 각광을 받았다.

또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을 출품한 인터아트 채널 부스와 특별전 '플랫폼 프로젝트'에 작품을 낸 미켈란젤로 피스톨레토의 작품 'Love Difference Table'이 전시된 공간에는 특히 관람객들이 대거 몰렸다.

작품을 사고 파는 아트 페어인 만큼 '얼마나 팔릴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일단 아트 페어의 특성상 유명갤러리 작가의 작품이 이미 예약 판매됐고, 특별전에 출품된 아이 웨이웨이와 카림 라시드의 디자인 작품이 고가에 팔리는 등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가나아트갤러리 이장은 과장은 "신생 아트페어이긴 하나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라며 "비엔날레의 격에 맞춰 작품을 내놓았는지 그 수준도 매우 높다"고 평했다.

광주비엔날레 관람을 겸해 광주를 찾은 이희숙(56·서울 노원구 상계동)씨는 "유명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 관람하는 것 자체로 감동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아트 페어 기간에는 저명한 아티스트와 컬렉터, 큐레이터, 비평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대담프로그램도 열린다. 개관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티켓가격은 일반권 1만원, 할인권(학생·단체) 7000원. 문의 062-611-3005.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에서 열리는 첫 국제 미술장터인 '2010 아트 광주'가 1일 오후 5시 상무지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식을 갖고 5일간의 장(場)을 연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서남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초비상

정부 지정·관리 기준 대폭 강화
전남도 "차별화된 발전안 제시"

경제자유구역의 내실있는 활성화를 위해 구역 지정과 관리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대신, 경제자유구역을 실질적인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 키우기 위해 외국인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당근'도 마련되고 구역간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특히 전남도의 경우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외에 목포 신항과 신안 일대를 '서남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한 상황이어서 향후 엄격한 조건에 따라 심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전략'을 확정하고, 경제자유구역특별법 등 관계법제·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전략은 단기 과제로 ▲엄격한 지정·개발 기준 마련 ▲조기개발 유인체제 구축 ▲외국인투자 인센티브제도 개선 ▲추진 행정체계 효율화 등 4개 분야, 9개 세부정책과제가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키로 했다. 개발수요·재원조달계획·부지확보 및 개발용이성 등 핵심 지정요건을 정해 엄격한 평가를 거쳐 인정되는 경우에만 신규 지정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해 인센티브제도 개선키로 했다.

한편, 전남도는 정부의 신규 선정 기준에 보완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역 특성과 비교우위에 따른 차별화된 발전 방안을 제시, 신규 지정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KTX망 구축 10년내 전국 2시간 생활권

기존철도 연결 '고속철 혜택' 분산
여수~서울 2시간 5분에 달린다

국토해양부가 1일 발표한 '미래 녹색국토 구현을 위한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은 전국을 고속철도망으로 묶어 마치 하나의 도시권에서 사람과 물자는 물론 부가가치가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동의 편리성은 극대화되겠지만 이로 인해 국토 간 불균형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제약이 사라지면서 경제·문화·관광 등 각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는 곳에 자원·시설·인적자원 등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미래 KTX 고속철도망 전략 개요=이 전략의 추진 과제는 전국 주요거점 고속철도망 연결, 거점도시권 내 30분대 광역·급행 교통망 정비, 5+2광역경제권의 특성화 발전 지원, 국토 전반을 대외 개방형 공간구조로 전환, 철도사업을 고부가가치 성장동력으로 육성 등이다.

호남고속철도(오송~목포)와 경부고속철도 잔여구간을 적기에 완공하고, 전라·경전선 등 건설·운영중인 노선은 최고시속 230km, 계획·설계중인 노선은 250km로 상향시키겠다는 것이다. 광주송정역, 광주역 등 전국 10곳의 KTX역에 상업·문화·업무 등이 결합한 복합환승센터를 만들고, 리무진으로 KTX역과 주변 도시를 연결하는 방안도 있다. KTX가 정차하는 광주 등 5대 도시권과 광양·여수 등 7개 중·소도시권을 광산업·디자인문화 등 지역별 주축 미래산업에 맞춰 특성화해 지역발전의 중심으로 육성하는 것은 물론 최고시속이 430km에 달하는 차세대 고속열차도 2012년까지 개발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KTX 고속철도망 구축에 연간 4조원에서 6조원으로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교통기반시설을 철도 중심으로 개편하고, 신규 수요 창출·사업비 절감·민간투자 유치에 나설 방침이다. 미래 KTX 고속철도망이 갖춰지면 지역내 총생산이 전국적으로 91조원이 늘고, 1일 이용객이 2007년 31만명에서 2025년 77만명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게 국토해양부의 분석이다.

자료/국토해양부 연합뉴스

◇광주~강릉 2시간19분, 서울~광양 2시간=이 전략은 단순히 거점도시 간 빠른 연결만이 아니라 전국 모든 도시의 초고속 이동을 염두에 두고 있다.

기존 철도와 고속철도를 연결해 KTX 혜택을 곳곳으로 분산시키기 때문이다. 전라선과 호남고속철도를 연결하면 당장 순천과 여수가 수혜도시가 된다. 부산항과 광양항은 경전선을 이용, 2단적재 화물열차로 셔틀 연결해 항만 간 연계를 강화하게 돼 부산~광양은 기존 5시간에서 2.7시간으로, 철도운임도 기존 14만7000원에서 8만8000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광주·전남뿐 아니라 전국 각지의 기존 철도와 고속 철도가 연계되기 때문에 부산~광주의 경우 기존 4시간2분에서 1시간40분으로, 서울~여수는 5시간15분에서 2시간5분으로 '혁명적인 단축'이 가능해진다.

이와 같이 전국이 1시간대 도시권으로 묶일 경우 지역 자원의 유출, 비행기나 고속버스 등 철도 이외 교통수단의 이용 급감, 국토 구조개편에 따른 불균형 심화 등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노경수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국토가 단일 도시권으로 묶이는 것은 그만큼 이동의 제약을 줄여 각종 교류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때 경쟁력이 있는 지 여부에 따라 도시 미래가 결정될 것"이라며 "광주·전남도 이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